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59호
------	--------

2019. 7. 1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4월 24일

나. 발 의 자 : 이선영, 김한태, 최 훈, 전익현, 한옥동, 한영신,
지정근, 김은나, 홍기후, 안장현, 홍재표, 김영수,
황영란, 이영우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년 4월 29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보류(재석위원 만장일치)
-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7월 11일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선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며, 시·군과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7조)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민주시민교육 교육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신현성)

-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기르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봄.
 - 안 제3조에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 민주적 의식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 교육이 일방적, 편향적,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봄.

- 다만, 조례안 제12조를 보면 민주시민교육 및 훈련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 현재, 도 출연기관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충남 온통시민 배움터 공모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운영 중에 있어,
 - 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강화 등을 통해 교육확대와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를 보면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시 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조항에 따라 본 조례안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오인환 위원(논산 1) :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함,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수정코자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수정안 관련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 제정과 더불어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시행에 있어 시차가 발생하는 점은 있으나 전반적 조례 제정에 동의.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중 안 제7조 민주시민교육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조례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안 제10조 충청남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안 제12조에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관한 위탁 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수정코자 함.

○ 수정 주요골자

- 안 제7조 위원회 존속기한을 추가함.
- 안 제10조 참석 위원에 대한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마련함.
- 안 제12조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삭제하고 위탁규정을 마련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제3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차치위원회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사회현실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충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③ 모든 도민은 개인의 능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민주시민교육 내용)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제도의 이해
2.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또는 평화통일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
4. 자유, 평등,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5. 그 밖에 평화와 글로벌시대의 시민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
3.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시민의 참여 방안
4.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관련 실·국장
3.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장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자문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전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민주시민교육 교육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5. 국내·외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6.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탁운영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④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자문을 거쳐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류·협력)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259호 관련
------	-----------

제안연월일 : 2019. 7. 11.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중 안 제7조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조례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안 제10조 충청남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안 제12조에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관한 위탁 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수정코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7조 위원회 존속기한을 추가함.
- 안 제10조 참석 위원에 대한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마련함.
- 안 제12조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삭제하고 위탁규정을 마련함.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중 제목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를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
3.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시민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안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2조 중 제목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를 ‘민주시민교육 운영’ 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를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를 준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한다.

②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p>제12조(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p> <p>① <u>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u></p> <p>② <u>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p> <p>1. ~ 7.(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12조(민주시민교육 운영) ①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p> <p>② <u>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u></p> <p>1. ~ 7.(삭제)</p> <p>③ ~ ⑤ (삭제)</p>	<p>민주시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사업 및 위탁운영으로 수정</p>
--	---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사회현실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충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③ 모든 도민은 개인의 능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민주시민교육 내용)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제도의 이해
2.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또는 평화통일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
4. 자유, 평등,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5. 그 밖에 평화와 글로벌시대의 시민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
3.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시민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관련 실·국장
3.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장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자문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전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 운영)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류·협력)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